

文·尹회동서 “국가적 현안 50조 추경 논의할 수도”

홍남기 발언에...尹측 “특정 공직자 발언 응대하지 않겠다” “인수위, 50조원 추경 논의 중...소상공인 재정적 도와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 결정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회동을 통해 50조 추경이 원활하게 조율되지 않을까하는 기류가 인수위 내에서 감지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프레스다방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추경 논의가 이뤄질지 묻는 질문에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제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겠다는 게 두 분의 합의 사항”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국가적인 난제, 코로나19, 그리고 어려운 국민,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논의는) 그런 면에서 추정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특별히 정부 당국자나 특정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응대

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에서 이 50조원 추경, 그리고 재정을 포함해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분들이 워낙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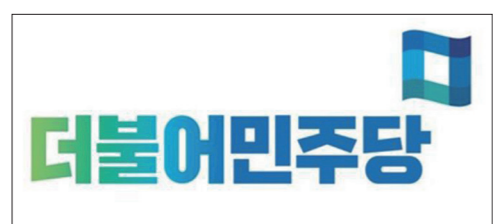
김 대변인은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주당에 당연히 요청을 드리는 사안”이라며 “협조해주시길 것이라 믿고 협조해주시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조원 추경은) 당선인의 공약이다. 상대 당에서도 협조해주시길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선욱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배심원제’·‘후보 토론회’ 변수 촉각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인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시민배심원제 경선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또 경선 과정에서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해 공천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중앙당은 청년 공천을 확대해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경선 방식 중 일부 지역에 배심원단 투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 규정에 따르면 경선 방식은 완전국민경선인 국민여론조사 100%와 국민참여경선인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배심원단 경선 등 4가지 방식이다.

최근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기준과 후보 검증 방식 등을 논의한 가운데 중앙당내에서 일부 지역에 배심원단 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배심원단 투표 적용 범위 관심...광역의원 비례·청년·여성경쟁구+a 일부지역 단체장 경선에 도입시 혼란·반발 예상...공천 영향 클 듯

조소섭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선기획단은 공천기준과 검증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고 거기에 더해 공천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방법을 내는 것을 추가로 기획하게 돼있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배심원제를 활용해 500명 배심원단을 만들어 공개오디션을 하고 배심원단이 투표를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여성·청년경쟁 선거구 일부가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배심원단 투표가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까지 적용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은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후보를 선출했다.

배심원단 투표가 도입될 경우 일부 지역은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경선방식을 준비해 온 출마 예정자들에

게는 혼란과 함께, 논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대서면으로 당에 복귀한 복당자를 위해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배심원단 투표를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도 어렵고 특정 지역에 한해 상징적으로 시·도당이 지정해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앙당의 공천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해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달리 당헌당규에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의무화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당 의결기구에 보고하고 예외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선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 후보자들은 토론회를 거쳐 검증과 함께,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송영길 “통도사서 文사저 바라봐 다시 ‘지못미’ 외치지 않아야”

송 전 대표,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 더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최근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

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를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등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권력 강화가 이런 검찰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최근 행적과 관련,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 5월10일부터 사시게 될 집의 건축 현장을 먼발치에서 바라봤다”면서 “통도사 뒤편에 있는데 아담하고 소박했다. 사진상의 민가 맨 뒤쪽하얀 집”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있다. 오세훈 현 시장과 맞설 중량감있는 정치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슬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